



[선박 이론 교육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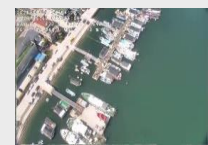
[현장 의견 수렴]



[해상 공사현장]



[어선 폐기물 적법처리 안내]



[무인비행기]



[HNS 분과 발표]



[CPTS 화물탱크 실습]

## 본청-지방청 간 정책소통 순회 워크숍 개최

[순회일정] 동해청(7.11), 중부청(7.13), 남해청(7.21)

[참석자] 방제기획계장 등 3명, 지방청 및 경찰서 소속지원 등

[주요내용] ①(선박 이론교육) 선박 기본용어 등 선박 기초이론 및 배관, 적재탱크 등 선박 의장과 선종별 사고 특성에 대한 이해 ②(주요 정책안내) 현업부서 운영 및 방제국 ESG 기본 계획공유, 방제국 주요 추진정책 공유 등

▶ 현업부서 운영, ESG 도입 등 방제국 추진 정책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방제요원 역량강화 워크숍일 진행하였드랬죠..^^

## 지방청 별 해양오염예방 테마점검 실시

[주관/시행] 지방해양경찰청 / 소속 해양경찰서

[점검기간] 7.18.(월) ~ 8.19.(금) / 4주간

※ (사전홍보, 예고) 언론매체, 현수막 게시 홍보 및 지도점검 사전예고 (1주간)

[점검대상] 지방청별 위험요소 분석, 자체 테마점검 대상 선정

구 분	점 검 대 상
중부지방해양경찰청	어선 및 수협급유소
서해지방해양경찰청	어선
남해지방 해양경찰청	부 산
	울 산
	창원. 통영. 사천
동해지방해양경찰청	해상공사 동원선박
제주지방해양경찰청	어선

## HNS 사고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및 실습교육 실시

[기간/장소] '22.07.07.(목) ~ 07.08.(금) / 한국해양대학교

[참석자] 총 32명(본청, 지방청, 경찰서,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위원 등)

[주요내용] 협의회 HNS 분과 발표(1일) 및 현장 실습교육(2일) 진행

현재 세계 2곳만 존재하고 있는 실제 선박과 유사한 케미컬 탱커 시뮬레이터 현장 실습으로, 화물탱크에 직접 들어가보고 탱크세척을 시현하는 등의 교육으로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.. ^^

▶ HNS 협약 발효 예정, 물동량 증가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요.. 다방면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.^^



요르단 항구, 염소가스 폭발(22.06월)



방글라데시, 항구도시 화학물질 컨테이너 폭발(22.06월)

### 위험물컨테이너(포장위험물) 반입신고 제도개선 추진

**[주요내용]** 위험물 컨테이너 반입 시 특수화물적부도 및 위험물 목록을 항만 운영정보시스템(PortMS)에 입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며, 관련법 개정을 위하여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와 업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.

### [ 컨테이너 해상운송 TMI !!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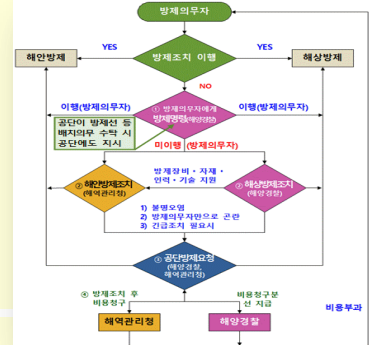
'20~'21년 간 컨테이너 해상유실 비율이 이전에 비해 400% 증가하였다고 합니다. '20~'21년 운항 중 유실 컨테이너 수는 3,113개로 이전 2년의 779개와 비교하여 4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 $\pi^{\wedge}\pi$  해상유실 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의 폭발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,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!

## 방제비용 부과 징수 업무에 대해 알아보아요~!! (기동방제과 연구모임 운영 중)

Let's Study Together

### 1)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대응 절차 및 방제비용

- ① 사고 발생 시 방제의무자에게 방제조치 명령
- ② 방제의무자의 조치 미이행 시, 방제의무자의 조치만으로 대규모 확산방지가 곤란한 경우, 상황에 따른 긴급방제 필요 시 해경 직접 방제조치
- ③ 불명해양오염사고, 방제의무자만으로 확산방지 곤란, 긴급방제 필요 시 방제조치기관(해경 등)은 공단에 방제 요청
- ④ 공단이 조치기관(해경 등)에 방제비용 청구 시 조치기관(해경 등)은 비용 지급



### 2) 방제비용 소송 사례

- ① **00호(케미컬운반선, 1,623톤) 엔진고장 사고(보령)** : 사고당시 선박은 이염화에틸렌 3,000톤 및 연료유 128톤 적재중이었으며, 사고지역은 다수의 양식장이 존재하였음. 이에 보령해경은 해양오염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선박을 어청도 인근까지 예인하였으며, 선박이 묘박을 할 수 있게 하였음. 실제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는 않았음.
  - 선주는 방제비용부과처분 취소소송(행정소송)을 제기함 :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박 구조이므로 선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
  - 법원의 판단 : 해환법 제64조 제4항, 제65조 제1항, 제68조 제4항에 의거,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존재 하였으며, 예인조치의 결과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방제조치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함. 피고(보령서)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(00호)의 청구를 기각. 원고 항소 및 2심 진행 중.

### 3) 어선 방제보험 제도 활용사례 (목포해양경찰서)

- 오염원/오염물질 : 제807 00호 (채낚기어선, 42톤) / 경우 약 1,100 ㄹ
- 사고경위 : 암초에 좌초되어 우현 연료탱크 파손으로 적재된 연료유가 해상에 유출, 방제조치 명령
- 방제조치 : 사고선박 파공부, 에어벤트 봉쇄 및 펜스형 유흡착재 설치, 회수 (방제비용 약 1,400만원)
- 어선보험 가입 시 방제비용 보상토록 제도 마련('22.1월 시행), 5톤 이상 어선의 73%가 보험 가입 중